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12회 임시회>

2012. 10. 18.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성 모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폐지이유

○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민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제도 및 법제처 등을 통한 법제 관련 상담이 용이하고 현행 조례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5.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1조, 「법률구조법」 제1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1990. 3. 26)되었으나,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6. 12. 31. 제정된 행정절차법이 1998. 1. 1.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행정법규상담실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폐지이유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166호, 1994.2.16),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504호, 1994.12.31), 부처별세계화추진기획반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9호, 1995.2.16)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역시 존치목적 상실,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5. 관계법령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폐지 조례안은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1994. 6. 9.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1994. 12. 31. 에 폐지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504호, 1994. 12. 31)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5776호, 1998. 4. 15)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제정이유

○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각 조례마다 흩어져 있어
운영이 불편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상위법에 근거 명확화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입법예고 대상 및 작성, 예고방법, 기간 등 명시(안 제3조~제8조)
- 나. 입법과정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규정(안 제9조~제12조)
- 다.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안 제13조)
- 라. 공포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정의(안 제 14조~제19조)

5.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각 조례마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제정하면서 미비한 일부 조항을 정비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입 법 예 고

제3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고문의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문은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공고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또는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비 용 추 계

제9조(작성대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제10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 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제13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군의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5장 공포 및 시행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절차)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5조(예산 등)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공포방법 등) ①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7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8조(시행일)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시행 유예기간)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별지]

○○ 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가.

나.

2. 비용 발생 요인

3. 관련조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국 △△과장 △△ 담당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새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문구가 불분명하고, 누락된 항목이 많아 이를 수정·보완하여 명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안 제2조)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및 직무(안 제4~5조)

5.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불분명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등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제 3항에 따른 업무 취업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2호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2호의 단서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8조2(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의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 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21조(위임규정)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12월 중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6.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7.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9.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3.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4.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5.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군정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마련 및 국제 교류에 대한 결정을 추가하는 등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에 대한 자동 위촉 해제 규정 마련(안 제2조)
- 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 다. 회의에 대한 수시 개최 규정 마련 등(안 제4조)
- 라.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규정 추가(안 제7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촉한 위촉
위원의 위촉 해제를 안전 심의 후 자동 위촉 해제되도록 정비하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제화추진협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군정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현실에 맞도록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4. 법령에 따라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

여야 한다.

- ④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⑤간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 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④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		심의방법		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결정 사 항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 ○ (인)

달성군군정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심의번호		심의방법		주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의결내용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달 성 군 군 정 조 정 위 원 회</p>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해 연임 및 직무 등을 명시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피소를 당한 담당공무원에게 500만원 이내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위촉 및 연임,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조)
- 나. 군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 수행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
- 다.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피소를 당한 경우 변호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5. 관계법령

- 「고문변호사위촉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해제와 관련하여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법률고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군수(개인으로서 군수가 아닌 행정기관으로써 법인격을 가진 군수)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임으로 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과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달서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우리군의 경우 5,000천원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10,000천원 정도임.
-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은 업무수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직원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①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업무담당부서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2.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관련 세금계산서 등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 회	의 회	회 신	회 신	비 고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소 송 사 건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법 령 해 석						
기 타						

【별 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개정 1995. 4. 25 조례 제1544호)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단순신청	100,000원 이내	없 음
	· 본안 관련신청	100,000원 "	
	· 변론있는 신청	150,000원 "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 500만원 미만	250,000원 이내	60% 이상 승소
	· 500만원 이상	400,000원 "	확정의 경우
	1,000만원 미만		착수금에 승소
	· 1,000만원 이상	600,000원 "	비용을 곱한 금액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1,200,000원 "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2,000,000원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500,000원 "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3,000,000원 "	
	3. 주요사건(승패에 따라 당시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1,500,000원 이내	"
	4. 상 고 심	본안사건 1/2이내 착수금의	"
	5. 환 송 심	본안사건 1/2이내 착수금의	"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소사례금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400,000원 이내	민사소송과 동일 "
	3. 중요사건(민사소송과 같음)	1,500,000원 이내	"
	4. 상 고 심	400,000원 이내	"
	5. 환 송 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
기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대 3. 검 증 비 4. 감정료 5. 출장비 및 여비 6. 복사료 등 기타경비	실 액 실 액 실 액 (다만, 현장검증때 소송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 액 "대구광역시 달성군여비 조례" 중 3급공무원 해당 액 실 액	

붙임 2)

관계법령

□ 고문변호사위촉규정

제1조 (설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5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의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 (대우)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 규정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자동 해산 규정(안 제3조제5항)

5.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토록 개정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굳이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비 상설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이견 없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6급”을 “규제개혁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⑤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6급이 된다.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개혁업무담당-----.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 -----범위----- -----.

붙임 3)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달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여러 가지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의 사기 및 자긍심을 높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청구 내용 중 100분의 60이상으로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 및 특별보상금 지급액 범위 확대(안 제5조)

5.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가 1981. 3. 11.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을 정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이견 없음.
- 타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10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에
개정한 자치단체에서는 통상적으로 200,000원에서 300,000원 정도
수준이며, 구미시의 경우에는 60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70”을 “60”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000원”을 “300,000원”으로,
“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6”을 “10”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1. ----- : ----- ----- 60 ----- -----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 : ----- ----- ----- 60 -----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②----- -----해당----- -----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 ----- ----- 제5조에 따른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p>② (생 략)</p> <p>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 략)</p> <p>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p> <p>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u>100,000원</u>이내</p> <p>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u>100,000원</u>이내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u>20,000원</u>이내</p> <p>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u>20,000원</u>이내</p> <p>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각 호의 어느 하나-----</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범위-----</p> <p>1.----- : -----<u>300,000원</u>-----</p> <p>2.----- : -----<u>300,000원</u>----- -----<u>100,000원</u>-----</p> <p>3.----- : ----- -----<u>100,000원</u>-----</p> <p>② ----- ----- -----<u>10</u>----- -----범위-----</p>
--	--

붙임 3)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소식지 게재 사항과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원고 게재 등에 대한 보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소식지 게재사항 정비(안 제3조)
- 나. 편집위원회 운영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안 제4조)
- 다. 소식지 원고 게재자 등에 대한 보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소식지 게재 사항을 다양화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식지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되며,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하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로 한다.

제2조 중 “소식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역사문화”를 “역사문화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발생”을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된 자
2. 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 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기재한 <u>대구광역시달성군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u> 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u> ----- ----- -----.
제2조(발행) <u>소식지</u> 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조(발행) <u>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u> ----- ----- -----.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고장의 <u>역사문화</u> 4. ~ 7. (생략) 8. <u>조례, 규칙, 훈령, 예규</u> 9. <u>공고, 고시</u> 10.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게재사항)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역사문화관광</u> 4. ~ 7. (현행과 같음) < 삭제 > < 삭제 > 8. <u>그 밖에</u> ----- -----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편 집 위 원 회) ----- ----- ----- <u>둘 수 있다.</u>

<p>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소식지 <u>발행</u> 전반 4.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4조(수당및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의2(보상) <u>소식지에 원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5조(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발행</u>----- 4. <u>그 밖에</u> ----- ----- <p>제14조(수당및여비지급) ----- ----- -----<u>범위</u>----- -----.</p> <p>제14조의2(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u>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달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된 자</u> 2. <u>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u>
---	---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보다 탄력적인 심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보상심의회의 기능을 수행 후 자동 해산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상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굳이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비 상설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을 ““직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상해 또는”을 “상해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 “시도의원 당해 년도”를 “대구광역시의원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을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상해 또는”을 “상해나”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경우 : 본인 또는 당해”를 “경우 : 본인이나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일로부터”를 “사망일부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해”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원————— ————— ————— —————.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u>직무</u> 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 ————— —————.
2. <u>삭제</u>	2. 삭제
3. <u>유족</u>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유족”이란 ————— ————— ————— —————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p>2. 직무상 <u>상해 또는 질병</u>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p> <p>3. (생략)</p> <p>4. <u>기타</u>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p> <p>② (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u></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u></p> <p>3.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u>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u></p> <p>② (생략)</p> <p>③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u>규정에 의한</u>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u>규정에 의한</u>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u>규정에 의하여</u>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2. ----- <u>상해나</u> -----</p> <p>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p> <p>1. -----</p> <p><u>대구광역시의원 해당연도</u>-----</p> <p>2. -----</p> <p><u>-대구광역시의원 해당연도</u>-----</p> <p>3. <u>그 밖의</u> -----</p> <p>----- <u>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u>에 따른</u>-----</p> <p>-----<u>에 따라</u>-----</p> <p>-----<u>에 따라</u>-----.</p>
---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 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장애란-----

-----에 따른-----

-----한정한다.

②-----상해란-----

-----상해나-----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②-----사망일부터-----

-----따라-----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계좌-----

<p>② (생 략)</p> <p>제9조(의원상해 보상심의회의 구성)</p> <p>① (생 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4. (생 략)</p> <p>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제10조(심의회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4. <u>기타</u> 군수가 요구한 사항</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 (생 략)</p> <p>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u>기타</u>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원상해 보상심의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에 따라 ----- -----.</p> <p>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p> <p>제10조(심의회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 <u>총괄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 ----- <u>대해서는 예산의 범위</u>----- ----- <u>그 밖에</u> ----- -----.</p>
---	--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배치를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나. 위원회의 구성, 구성비율,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록 등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기능 및 임기, 분야별
위촉위원의 구성비율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기간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장)
3.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배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 나. 공립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및 신규시설 추가
- 다. 보육위원회 조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
- 라. 보육의 우선제공, 위탁운영기간, 종사자 휴가 등 개정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관련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 중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및 신규시설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위탁운영기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어린이집”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입소순위)”를 “(보육의 우선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중 “의한 수급권자”를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 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신고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위원회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3년”을 “5년”으로, “만료시”를 “만료시 5년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 라 한다)”를 “종사자”로 한다.

제9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를 “(위탁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위원회의”를 “보육정책위원회의”로, “취소”를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제”를 “해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중 “군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의 “기타 근무성적”을 “그 밖에 근무내용”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이 조례시행 후 체결되는 위탁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1】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매곡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4길 11, 203동 1층(주공아파트)
죽곡휴먼시아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6, 106동 1층(죽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서재휴먼시아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4길 2, 108동 1층(서재휴먼시아아파트)
하빈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04
옥포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4길 25
구지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3길 12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시설설치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p> <p>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3. (생략) 4. 기타 보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p> <p>제4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p> <p>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p> <p>제3조(업무)-----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p> <p>제4조(보육의 우선제공)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1. ----- 따른 수급자-----</p> <p>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p>

<p>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p> <p>4.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 타 결손가정의 자녀</p> <p>5.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 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p> <p>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p> <p>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p>
<p><신 설></p> <p>제5조(보육료) ①보육료는 대구광역시 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 에서시설장이 정하고, 이를 군수에 게 신고한다.</p>	<p>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 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신고 한다.</p>
<p>제6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 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 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한다.</p> <p>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 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u>보육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p>	<p>제6조(운영관리)①----- -----, 「영유아 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24조제2항에 따라----- -----.</p> <p>②-----에 따라----- ----- -----.</p> <p>③-----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육</p>

<p>야 한다.</p> <p>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위탁운영기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생략)</p> <p>⑥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u>보육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u>취소</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p>	<p><u>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u> -----.</p> <p>④-----에 따라 -----.</p> <p>제7조(위탁운영기간) -----에 따라 ----- 5년 ----- 만료시 5년이내의 범위에서 -----.</p> <p>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종사자-----.</p> <p>제9조(행위의 금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탁의 해지) ----- <u>보육정책위원회의</u> ----- 해지-----.</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	---

<p>군수가 약정을 <u>해제</u>하고자 하는 경우</p> <p>제13조(시설종사자) ① <u>보육시설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u></p> <p>② <u>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5조(휴가) ① <u>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u></p> <p>② <u>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u></p> <p>③ <u>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곤란한 때 허가한다.</u></p> <p>⑤ <u>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u></p> <p>제16조(징계위원회) <u>시설종사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군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u>해지</u> -----</p> <p><삭 제></p> <p>제15조(휴가) <u>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16조(징계위원회) ----- ----- <u>보육정책위원회</u> ----- -----</p>
--	---

<p>제17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u>각 호의 1과</u> 같다.</p> <p>1. (생략)</p> <p>2. <u>기타종사자 - 임면권자</u></p> <p>제18조(징계의 종류)① (생략)</p> <p>②<u>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u> 같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자</p> <p>③<u>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u> 같다.</p> <p>1. ~ 5. (생략)</p> <p>6. <u>기타 근무성적이</u>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자</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징계권자)-----<u>각 호의 어느 하나와</u>-----.</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의</u>-----</p> <p>제18조(징계의 종류)① (현행과 같음)</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와</u>-----.</p> <p>1. ~ 3. (현황과 같음)</p> <p>4. <u>그 밖에</u>-----</p> <p>-----</p> <p>-----</p> <p>③-----<u>각 호의 어느 하나와</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근무내용이</u>-----</p> <p>-----</p> <p>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p>
---	--

붙임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과장)
3.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 징수 및 진료비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보건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수입금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라. 보건진료소 예산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업무수탁” 항목 삭제

5.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16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보건진료소 운영 회계처리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임명과 업무보조원 채용 및 보수,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장 임명, 재정, 업무수탁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운영에 필요한 진료비 진료수가, 징수 및 납부 조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운영협의회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무,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에 준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징수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 등 사용 잔액은 군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2011.12.16)페이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예산 편성·집행 및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보건진료소 수입은 세입조치하고 운영 예산편성은 군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주민에게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진료소 운영조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시설유지비, 의료장비구입, 보건사업비 등 사업 수행을 전제로 5년간 소요비용을 추산함.

나. 추계 결과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18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1,818백만원 정도의 운영수입이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세외수입)으로 조달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보건소 정기수 과장 손성호 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367,416	365,472	363,528	361,584	359,640	1,817,640
의료사업수입 진료소 일반환자 진료		367,416	365,472	363,528	361,584	359,640	1,817,640
세 출		361,015	362,274	363,607	365,022	366,480	1,818,398
인건비(업무보조원)		20,995	22,254	23,587	25,002	26,460	118,298
사무관리,공공요금등		132,840	132,840	132,840	132,840	132,840	664,200
의약품구입,보건사업		180,180	180,180	180,180	180,180	180,180	900,900
시설유지,자산취득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재원 조달		367,416	365,472	363,528	361,584	359,640	1,817,64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367,416	365,472	363,528	361,584	359,640	1,817,64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붙임 1. 【별표 1】 재원조달(수익금) 세부내역 추계
 2. 【별표 2】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

【 별표 1 】 재원조달(수익금) 세부내역 추계

(단위 : 천 원)

연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계		1,817,640	
2013	・ 진료비수입 - 본인부담금 900원×14명×240일×9개소 = 27,216,000원 - 건강보험청구분 3,000,000원×12월×9개소 = 324,000,000원 - 의료급여청구분 150,000원×12월×9개소 = 16,200,000원	367,416	
2014	・ 진료비수입 - 본인부담금 900원×13명×240일×9개소 = 25,272,000원 - 건강보험청구분 3,000,000원×12월×9개소 = 324,000,000원 - 의료급여청구분 150,000원×12월×9개소 = 16,200,000원	365,472	
2015	・ 진료비수입 - 본인부담금 900원×12명×240일×9개소 = 23,328,000원 - 건강보험청구분 3,000,000원×12월×9개소 = 324,000,000원 - 의료급여청구분 150,000원×12월×9개소 = 16,200,000원	363,528	
2016	・ 진료비수입 - 본인부담금 900원×11명×240일×9개소 = 21,384,000원 - 건강보험청구분 3,000,000원×12월×9개소 = 324,000,000원 - 의료급여청구분 150,000원×12월×9개소 = 16,200,000원	361,584	
2017	・ 진료비수입 - 본인부담금 900원×10명×240일×9개소 = 19,440,000원 - 건강보험청구분 3,000,000원×12월×9개소 = 324,000,000원 - 의료급여청구분 150,000원×12월×9개소 = 16,200,000원	359,640	

【 별표 2 】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산출내역	내용	소요예산
계			1,818,338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38,880원 × 5일 × 12월 × 9개소 =20,995,200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14,760,000원 × 9개소 = 132,840,000원 · 의약품구입 및 보건사업 20,020,000원 × 9개소 = 180,180,000원 · 시설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3,000,000원 × 9개소 = 27,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 일반운영비 · 의료 및 보건사업지원 · 시설 및 물품관리 	361,015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41,210원 × 5일 × 12월 × 9개소 =22,253,400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14,760,000원 × 9개소 = 132,840,000원 · 의약품구입 및 보건사업 20,020,000원 × 9개소 = 180,180,000원 · 시설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3,000,000원 × 9개소 = 27,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 일반운영비 · 의료 및 보건사업지원 · 시설 및 물품관리 	362,274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43,680원 × 5일 × 12월 × 9개소 =23,587,200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14,760,000원 × 9개소 = 132,840,000원 · 의약품구입 및 보건사업 20,020,000원 × 9개소 = 180,180,000원 · 시설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3,000,000원 × 9개소 = 27,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 일반운영비 · 의료 및 보건사업지원 · 시설 및 물품관리 	363,607

연도	산출내역	내용	소요예산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46,300원 × 5일 × 12월 × 9개소 =25,002,000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14,760,000원 × 9개소 =132,840,000원 · 의약품구입 및 보건사업 20,020,000원 × 9개소 = 180,180,000원 · 시설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3,000,000원 × 9개소 = 27,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 일반운영비 · 의료 및 보건사업지원 · 시설 및 물품관리 	365,022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49,000원 × 5일 × 12월 × 9개소 =26,460,000원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등 14,760,000원 × 9개소 =132,840,000원 · 의약품구입 및 보건사업 20,020,000원 × 9개소 = 180,180,000원 · 시설유지비 및 자산취득비 3,000,000원 × 9개소 = 27,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업무보조원) · 일반운영비 · 의료 및 보건사업지원 · 시설 및 물품관리 	366,480

붙임 2)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